

 보건복지부		<h1>보도자료</h1>	
		<h2>11월 6일(수) 행사 시작 (10:00) 이후 보도</h2>	
배 포 일	2019. 11. 5. / (총 10매)	담당부서	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
단 장	임근찬	전 화	044-202-3840
시스템2팀장	서민수		044-202-3870
담당자	이길원		044-202-3871

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

-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연계 추진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제주특별자치도(지사 원희룡, 이하 '제주도')와 함께 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이하 '차세대 시스템)」의 “공공·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(플랫폼)”(이하 '민·관 협업 플랫폼')을 성공적으로 구축·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(MOU)을 11월 6일(수)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(일시·장소) 11월 6일(수) 10:00, 사회보장정보원 21층(서울 중구)

❖ '민·관 협업 플랫폼'이란?

-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, 보건과 복지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,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구축되는 플랫폼



-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‘통합복지하나로’ 사업에서 민·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.

< 주요 사업 설명 >

❖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’ 사업 (보건복지부)

- (개요)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, 급여 및 서비스 결정 등 업무 처리 기능 제공 중
 - * 중앙부처 350개 복지서비스와 관련, 226개 시군구, 3,500여 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활용
- (현황) 복지대상자 3,076만 명, 복지에산 84조 원, 복지사업 350종 관리 중 ('18년, 사업별 중복 포함)

❖ 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’ 사업 (보건복지부)

- (사업 개요)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 진행
- (사업 기간) '19~'22년
- (예산 규모) 1,970억 원 ('18.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완료)

❖ ‘통합복지하나로’ 사업 (제주도)

- (개요) 보건·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·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, 현장중심, 민관 협업 중심의 제주형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혁신 추진
- 주요 추진 내용
 -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, 지역 케어회의 구성
 - 공공사회보장-보건-의료-주거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
 - 3개 읍면동 대상 시범 사업 운영('20년~)

-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,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,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.

-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·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.
-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·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·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.
-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,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·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- 다만,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.
- 한편, 제주도는 '통합복지하나로' 사업을 실시하여 사람·현장·민관 협업 중심으로 통합(원스톱)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,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- 이를 바탕으로 보건·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,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,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.

- 다만,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.
 - 특히,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*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,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.
 - * 노인,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, 건강 관리, 요양,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추진 ('19.6~ , 16개 지자체 참여 중)
- 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, 제주도가 '통합복지하나로'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·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,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다.
 - 첫째, 보건복지부는 민·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,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.
 - 둘째, 제주도는 민·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'통합복지하나로' 사업을 수행하며,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.
 - 셋째,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,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 (Closed Beta Test)* 작업을 지원한다.
 - * 제주도 내 읍면동 및 민간기관에서 정보 공유, 사례관리, 서비스 의뢰 등 민·관 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, 전국 개통('22년)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 추진
 - 넷째,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.

-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정부는 지역 사회에서 민·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- 아울러 “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,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“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증척되기도 하고,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”고 말했다.
- 또한 “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읍면동↔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,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『따로 또 같이』 추진한다”고 밝혔다.

- < 붙임 >
1. 업무협약식 개요
 2. 민·관 협업 플랫폼 개요
 3. 제주도 ‘통합복지하나로’ 사업 개요
 4. 보건복지부 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 구축 사업 개요

붙임1

업무협약식 개요

- (목적)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 분야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
- (일시) 11.6(수) 10:00~10:40
- (장소) 사회보장정보원 21층(임원회의실)
 - *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건물(명동, 충무로 인근)
- 주요 참석자
 - (복지부) 박능후 장관, 사회복지정책실장
 - (제주도) 원희룡 지사, 보건복지여성국장
 - (유관기관) 사회보장정보원장, 제주도 사회복지관협회장 등
- 세부 일정

시 간		진 행 순 서
10:00~10:15	15분	▶ 행사 시작 및 주요 내빈 소개
10:15~10:20	5분	▶ 인사말(박능후 장관)
10:20~10:25	5분	▶ 인사말(원희룡 지사)
10:25~10:30	5분	▶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시범사업 운영 방안 설명 (임근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단장)
10:30~10:40	10분	▶ 협약 내용 설명 및 협약식 진행

붙임2

민·관 협업 플랫폼 개요

- (목적)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, 보건과 복지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,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
 - (정보연계) 개별 기관 대상으로 대상자 정보, 급여·서비스 이력 정보, 민간·서비스 자원, 공공·민간 사례관리 이력 조회 등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공
 - (사례관리) 8대 공공 사례관리* 및 복지분야의 민간 사례관리**영역에 대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통합·연계하여 하나의 시스템 모델로 구축하고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- * 위기가구(통합), 독거노인, 드림스타트, 방문건강, 자활, 정신, 중독, 의료급여
 - ** 복지관(사회복지시설), 가정위탁, 아동자립 등
 - (자원관리) ① 자원등록자에게 공개 범위 등 자원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기존 공공 중심의 복지자원 관리 체계를 탈피하고 민간의 자원 등록 유인 제고,
 ② 욕구에 기반한 자원 검색 효율화 방안 마련
 - (서비스의뢰) 정보 공유 종수 및 서비스 의뢰 기관 확대 등
- ☞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병행 추진

< 민·관 협업 플랫폼 기능 개요도 >



붙임3

제주도 '통합복지하나로' 사업 개요

- 보건·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, 현장중심, 민관 협업 중심의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혁신

추진배경

- 신청주의에 의해 제공되는 정부의 360여개의 급여가 정보력에 따라서 이중삼중 중복되거나 소리 없는 약자는 소외
- 민·관·지역사회가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 과정상 협업 부재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분절, 중복으로 효과성과 복지체감도 저하
 - ☞ 공공·민간 간 수평적 의사결정 가능한 민주적 복지행정 전달체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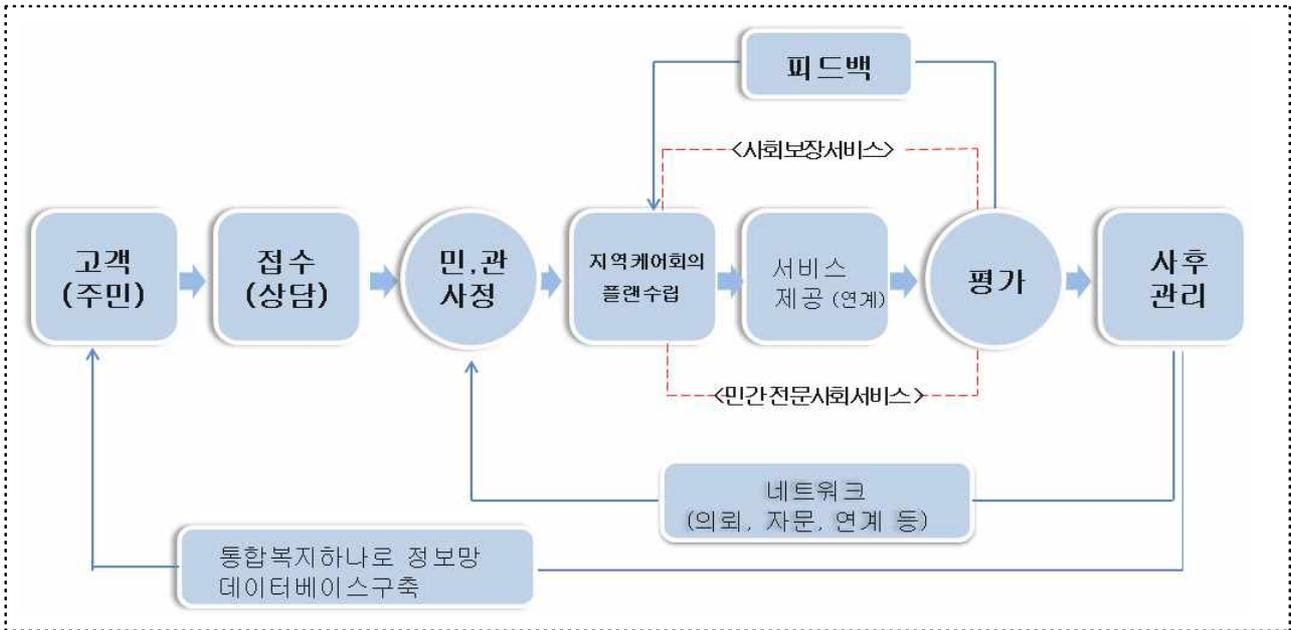
추진방향

- 읍면동과 지역사회가 결합된 「통합복지하나로*」로 전달체계 구축
 - * 전화 1통으로 보건, 의료,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욕구와 문제 신속 접수 및 제공 등 원스톱 지원 체계
-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따로 또 같이 진행

주요 내용

- 읍면동이 플랫폼 역할 수행
 - 맞춤형복지팀에 전담인력 2명* 배치, 도·행정시에 지원팀 설치
 - * 복지사각지대 발굴, 민관 자원관리·개발·연계,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, 초기상담 신청 접수·연계 및 직접 서비스 제공, 보건복지 욕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욕구 조사 및 개별 플랜 수립 등
 - 보건복지 민간전문가 3인(마을복지플래너) 배치*
 - * 민·관 서비스 제공 통로, 복지사각지대 발굴, 찾아가는 케어 제공, 자생단체의 역할 지원 등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가

- 지원조직인 민·관 협의체 지역케어회의 구성
 - * 공공과 민간의 학계·현장전문가 및 주민 등 20명 내외
- 공공사회보장 + 보건 + 의료 + 주거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
 - * 제주도 + 건강보험관리공단 + 국민연금 + LH 컨소시엄 체결



□ 추진일정

- ('19 상반기) 제주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(사회 복지연구센터와 협업)을 통해 단기·중장기 실행계획 수립
- ('19 하반기) 읍면동 3개 선정 시범사업 실시
- ('20 ~)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실시

□ 기대효과

-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 강화(30% ↑) 및 사각지대 감소
- 공공사회 정책 수혜율 향상(30% ↑)으로 도민의 복지권 보장
- 사회적 일자리 확대, 경제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회복

붙임4

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(개요)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 진행
- (예산 규모) 1,970억원('18.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완료)
- (사업 일정) '19~'22년 ('21.9월부터 단계적 계통)
 - (시스템 개발) 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('19.4~11월) → 분석·설계('19.12~'20.9월) → 개발('20.10~'21.9월) → 단계적 계통('21.9월~)

□ 주요 추진 과제

-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'복지멤버십(가칭)' 도입
 - 개인의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·판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
 - 소득·재산·인적정보, 사업별 선정기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수급가능성 높은 사업을 제시
-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
 - 온라인 신청 사업 확대(19→41종),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간소화, 신청·접수창구 확대* 등 통해 복지사업의 신청 편의성 제고
 - * △병원·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곳에서 복지사업 신청, △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정된 신청·접수지 제한의 완화 등
- 민·관 협력 시스템 마련을 통해 끊임 없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
 - 지자체,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기관이 복지대상자를 함께 지원하는 연계·협력 플랫폼을 구축
 -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·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끊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능 마련